

특별기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모두가 동심협력할 때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농번기가 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눈과 밤, 시설하우스를 채우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계절근로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농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일(日)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고, 지역 내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단순히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함으로써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생활 관리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다.

전남에서는 2023년 나주배원예농협과 풍양농협 등 2개 농협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지난해 15개 농협으로 확대됐고, 37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5만4481명의 인력지원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20개 농협에서 62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참여해 10만명 이상의 인력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협 전남본부는 입국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혹시기 농작업 안전물품과 속소 생활 편의물품을 지원하는 등 운영 농협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특정 농가나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남은 농업 경지면적(27만4000ha)이 넓고, 마늘·양파 등 노동집약적 작물 비중이 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이 높지만,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도 따른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업 운영비 부담과 사회보험 적용 구조다. 지난해 농협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최저임금 1만30원) 기준으로 계절근로자에게 월급 209만원을 지급했으나, 기상 상황 등에 따른 이용일수 부족으로 농가는 지불하는 이용료가 월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농협이 부담한다.

또한 사업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임금의 20% (41만8000원) 이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0만원 이내에서만 공제하고, 숙소 생활비와 부식비 일부를 농협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본국에서 별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서 전해 들은 또 다른 어려움은 계절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 가입에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퇴직'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월평균 10만9000원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다.

공동숙소 확보와 운영 문제 역시 현장의 큰 과제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식품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담양·해남)과 농협의 유하시설 활용(강진)을 통해 공동숙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자체가 공동숙소를 직접 건립하고 운영을 농협에 맡기는 방식(무안·영암)도 시도되고 있다.

농협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계절근로자의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동안 한시적(5~8개월)으로 근무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농협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이 넘는 일부 농협은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 의무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농업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영상의 부담이 큰 만큼 지속성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농협과 중앙정부, 지자체, 농업인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때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때, 전남 농업의 든든한 베팀복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담양 전차포사격장, 통합특별법으로 풀어야

박종원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대통령의 물결이 일고 있는 지금, 담양군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전차포사격장 이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나주, 함평, 장성 방향으로 확장하며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지만, 담양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불균형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과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국방력 강화와 실전 훈련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국방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유지될 수는 없다. 담양군은 그동안 광주 발전을 위해 수많은 양보를 감내해 왔다. 행정구역상 북광주(C)가 서남양(C)로 병기되어 있지만, 실상은 '북광주'라는 명칭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지금의 사격장 문제도 더 이상의 일방적인 양보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군사시설이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짚어야 한다. 현대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국방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대통령의 본질은 메가시티 형성과 방사형 개

발에 있다. 광주는 나주시 에너지밸리산업단지와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 함평군 월야면·광주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산단, 장성군 나노산단(광주 첨단산단 연접), 그리고 AI융복합지구로 지정된 첨단지구 등으로 사방으로 팽창하며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담양군의 성장 축이 담양에서 가로막히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전차포사격장은 담양군 대전면에 자리 잡고 약 90만 평의 광활한 부지에 전차포, 40mm 기관포, 기관총 등의 사격훈련을 70여 년째 지속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설치된 이래 끊임없는 민원을 불러일으켰고, 2001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전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사격장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토양과 수질 오염 우려를 낳으며, 무엇보다 주변 개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기업 유치는 물론 인구 유입도 가로막히면서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담양군이 발전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군사시설 하나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은 곧 제정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있다. 특별법에는 특별시장과 군수가 관할 부대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공식적으로 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견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전차포사격장 이전의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다. 통합특별법은 국방과 민생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산업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산업 공간과 미래형 인프리를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광주의 방사형 개발전략은 바로 그 해답을 보여준다. 나주, 함평, 장성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물결 속에서 담양 또한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전차포사격장이 존재하는 한 담양의 미래는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장애요인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실이다.

70년 동안 담양군민의 건강과 희망을 억눌러온 전차포사격장은 광주전남 대통령의 출발선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군사보호구역의 변경과 해제를 정식으로 견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담양 발전의 새 전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방과 민생,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충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길이 필요하다. 이제는 결단의 때다. 담양의 힘을 힘을 더해, 소음이 아닌 희망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

독자투고

'블랙아이스', 서행이 답이다

겨울철 도로의 불청객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얼음막이다.

블랙아이스는 기운이 급격히 떨어질 때 도로 표면에 얇고 투명하게 형성되는 얼음층으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음 3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첫째 그늘진 도로나 교량 위, 터널 입·출구는 무조건 멀어 있다고 가정하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둘째 급제동과 급행들 조작은 차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3배 이상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셋째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헛들을 유지해야 스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블랙아이스는 위협적이다. 천천히 가는 것 만이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나주경찰도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귀갓길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밀로 뛰는 치안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

사설

광주·전남 행정통합, 청년일자리 최우선해야

광주지역 대표 경제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청년일자리 확대방안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에 띈다.

광주경영자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시·도 행정통합이 재정·시장 규모 확대 등 단순한 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에게 체감되는 고용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터지로 떠나는 현상이 갑자기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광주는 지난해 1만4000명의 순유출을 보이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순유출률을 보였는데 이 중 57%인 8000명이 20대(5200명)와 30대(2800명)였다.

전남은 광주와 달리 지난해 노동자 청년일자리로 인구는 2000명 가량 늘었지만 10대는 전년에 비해 1100명이 줄었고 20대는 5100명이나 감소하는 등 청년층 감소 흐름세는 여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의 열악한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주거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광주경총은 행정통합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산업 집적을 통해 질 좋은 상용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통합 재정 규모인 연 5조원도 청년고용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투자·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빛그린산단, 여수국가산단, 첨단지구 등 통합 산단 입주·증설 기업에 청년 정규직 채용 비율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과 연동하는 '청년고용 의무·인센티브 폐기' 설계를 제안했다.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청년전문연구직, 청년 산학 장기인턴, 청년 창업보육센터를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하는 '청년전용 트랙'으로 뛰어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광주경총의 이같은 제안은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이니만큼 이를 시·도통합 정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길 바란다.

전남 관광객 6500만시대…체류형 전환도

그동안 구호 단계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였던 '관광전남'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남 방문객이 지난 2024년보다 65만명 늘어난 6456만명으로 집계됐는데 관광 위주 단기 방문이 주를 이루던 예전과 달리 체험형·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즉, 기존 축제에 캠프, 강성힐링 등 관광객이 '혹'할 만한 콘텐츠를 결합한 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증가한 반면 그냥 매년 열던 '그저 그런' 이후 의존형 단일 축제나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한 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눈에 띈 점은 방문객 평균 체류시간이 24시간 7분으로 전국 평균(17시간 1분)보다 7시간 이상 길다는 것이다.

이는 전남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숙박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완결형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할 점도 많았다.

먼저 KTX와 주요 관광지 간 연계 부족, 섬·해안 이동 불편 등 취약한 접근성은 개별 여행객 유입에 제약을 가져왔다.

또 지자체들이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 가격 할인 중심 전략은 첫 방문 때는 효과가 있지만 재방문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축제가 5월과 10월에 집중되는 계절 편중 구조, 콘텐츠 복제와 시설 위주 개발에 따른 관광브랜드 경쟁력 약화, 관광 서비스 종사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남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7102만명 등 연평균 관광객 10% 성장을 통해 2030년 1억명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형 체류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목포~보성신 철도 등 SOC 확충을 관광상품과 연계키로 했다.

특히 올해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과 지역화폐 환급형 반값 여행을 통해 재방문·재소비를 유도하고, 워케이션 마케팅으로 청년층 장기 체류를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의 이같은 노력이 빛을 발해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민진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